남악·오룡지구 '알박기 주차' 방치…무안군 '맹탕' 교통행정

카라반·대형버스 장기 점유 주민 불편

주차장법 개정 불구 계도장 발송 그쳐

주택가·골목길 '풍선효과' 악순환 반복

주민들 "실질 견인·과태료 시급" 지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남악·오룡지구 일대 공영주차장과 주택가 이면도로가 카라반과 대형 차량들의 '알박기' 주차로 몸살을 앓고 있다.

주민 불편이 극에 달하고 법적 제재 근거까지 마련됐음에도 무안군은 소극적인 계도에만 그치며 '맹탕 행정'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9일 무안군에 따르면 신도시 개발로 인구와 차량 통행이 급증한 오룡지구 내 주거 밀집 지역 인근 도로변과 공영주차장에 캠핑용 카라반과 대형 버스 등이 장기간 고정 주차돼 있다. 〈사진〉

본래 주민과 방문객 편의를 위해 조성된 공공시설임에도 일부 카라반 소유자들이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1년 이상 개인 차고지처럼 점유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정작 주차 공간이 필요한 주민들은 이중 주차와 불법 주차로 내몰리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솜방망이 단속이 낳은 '풍선효과'다. 주차장에서 단속 안내문을 받은 일부 차량이 아예 단속이 느슨한 주택가 공터나 흰색 실선 도로변으로 자리를 옮겨 다시 장기 주차를 이어가고 있다.

대형 차량들이 좁은 주택가를 점령하면서 주차난은 물론, 보행자 시야를 가려 통행 안전까지 심각하게 위협하는 상황이다.

오룡지구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카라반과 대형버스가 몇 달째 같은 자리를 차지해도 전혀 달라지는 것이 없다"며 "주차장에서 차를 빼라고 하면 보란 듯이 주택가 도로변에 세워 놓는다. 뻔히 큰 불편을 겪고 있는데 언제까지 안내문만 보낼 것인지 답답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이 주민은 "보여주기식 단속이 아니라 장기 주차 차량이 아예 주택가를 맴돌지 못하도록 강제 견인 등 근본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제는 제재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음에도 무안군이 소극적 대처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이다. 2024년 1월 개정된 주차장법 시행령에 따라 무료 공영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방치 주차된 차량은 지자체의 이동 명령과 견인 등 강제 관리 대상이 된다. 차량이 파손돼 운행이 불가한 경우는 방치 기간 15일 이상이면 조치할 수 있다.

무안군 관계자는 "카라반 소유자를 파악해 오는 25일까지 이동하라는 안내문을 발송했다"며 "장기 주차 시 과태료 부과·강제 이동 조치가 될 수 있음을 알렸고 주차장에 한해서는 법대로 조치하겠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실제 강제 이동 명령이나 견인, 과태료 부과 등 구체적인 후속 행정 조치 내역은 명확하게 내놓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주택가 흰색 실선 도로변 주차에 대해 "공영주차장과 법적 처리 근거가 다르다"며 "오룡지구 공영주차장을 향후 유료화하는 방침을 검토 중"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사안별 위반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관계 법령에 따른 즉각적인 처분을 병행해야 한다"며 "언론이 지적할 때만 마지못해 계도하고 차량은 다시 다른 곳으로 숨어드는 악순환을 끊어내지 못한다면 무안군의 주차 행정은 관리가 아닌 명백한 방치"라고 비판했다.

/무안=김상호 기자

함평군, 건축 복합민원 처리 시간 단축한다

부서 인허가 협의 기간 15일→10일로

'3단계 책임관리제' 민원 어려움 해결

선제 점검으로 시간·경제적 부담 완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이 건축 인허가 등 복합민원 처리 과정에서 부서 간 내부 협의에 걸리는 기간을 앞당기고 관리를 더하는 '3단계 책임 관리제'를 시행한다.

9일 함평군에 따르면 여러 부서의 협조가 필수적인 건축 복합민원의 내부 협의 기간을 기존 15일에서 10일로 단축키로 했다.

건축 인허가는 개발행위, 농지·산지 전용, 도로, 환경, 상하수도 등 다수 부서의 검토와 협의가 맞물려 있어 해결에 긴 시간이 소요된다.

이에 군은 부서 간 유기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해 불필요한 서류 지연을 막고 행정 처리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제도 안착을 이끌 핵심 장치인 '3단계 책임 관리제'는 기한 내 민원 처리를 방해하는 요인을 미리 찾아내 해결하는 선제 관리 시스템이다.

구체적으로 민원 처리 기한 3일 전에는 협의 부서 실무 담당자와 팀장에게 진행 상황을 의무적으로 공유한다. 이어 기한 1일 전에는 부서장에게까지 상황을 보고한다.

기존 담당자 중심의 민원 처리 방식에서 벗어나 팀장과 부서장이 함께 검토하고 해결하는 '3단계 관리 체계'를 구축해 민원인이 체감할 수 있는 신속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군은 제도 시행이 조직 내부의 소통과 책임감을 끌어올리는 것은 물론, 민원인의 대기 시간과 반복 방문에 따른 경제·시간적 불편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남오 함평군수는 "건축 인허가는 부서 간 협업이 신속·정확한 서비스의 핵심"이라며 "불필요한 지연 요인을 사전 차단하는 책임 관리제를 추진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빠른 건축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함평=기영규 기자

장세일 영광군수, 보건소 신축 국비 지원 건의

이개호 의원 면담 지원단가 부족 호소

지방비 부담 사업비 61억원 반영 요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은 9일 "최근 장세일 군수가 국회를 찾아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과 면담을 갖고 보건소 신축 사업을 위한 국비 추가 지원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사진〉

영광군 보건소 신축 사업은 노후화된 보건의료시설을 현대화하고 군민에게 보다 쾌적하고 체계적인 공공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다.

영광읍 옛 우시장 부지에 총사업비 329억원을 투입해 지하 1층·지상 4층(연면적 6천348㎡) 규모로 건립된다. 오는 2027년 착공해 2028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문제는 행정 절차가 길어지며 건설 공사비가 급등했다는 점이다. 2024년 당시 책정된 국비 지원 단가는 ㎡당 200만원에 불과해 막대한 지방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장 군수는 2027년 기준 단가(㎡당 327만9천원)를 적용해 부족분 61억원의 국비 추가 반영을 요청했다. 또한 보건소 신축으로 동일하게 재정 압박을 겪고 있는 담양·장성군과의 공동 건의 사항도 함께 전달하며 정부 차원의 지원 단가 현실화를 촉구했다.

장세일 영광군수는 "보건소 신축은 단순한 청사 건립이 아닌 군민 건강권을 지키는 필수 사업"이라며 "3개 군이 연대해 추가 재원을 확보하고 재정 부담이 사업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광=김동규 기자

월출산 국화축제 '문화누리카드' 결제 지원

영암군, 푸드트럭 등 6곳 임시가맹점 지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은 9일 "'2026 월출산 국화축제' 방문객 편의를 위해 축제장 내에 문화누리카드 임시가맹점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월출산기찬랜드 일원에서 오는 15일까지 열리는 축제 기간 동안 푸드트럭 3곳과 농특산물 판매장 3곳 등 총 6곳이 문화누리카드 임시가맹점으로 지정됐다.

문화누리카드 이용자들은 가맹점 표시가 부착된 부스에서 다양한 먹거리와 농특산물을 카드로 편리하게 결제할 수 있다. 영암군은 축제와 연계한 가맹점 운영이 방문객 만족도를 높이고 소비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철 문화예술과장은 "축제장을 찾는 문화누리카드 이용자들이 가을 국화의 정취와 함께 다양한 먹거리를 즐기길 바란다"며 "지역 축제와 연계해 군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겠다"고 말했다. /영암=나동호 기자



전남광주 완도군 생활문화센터에서 최근 열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주민설명회' 참석자들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기원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완도군 제공〉

완도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신청

농식품부 공모 접수…19일께 확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은 9일 "인구 감소 위기 극복과 도서 지역 생활 격차 해소를 위해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에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공모 예비 계획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모에 선정되면 정부 기본 지급액 월 15만원에 군 자체 재원 2만원을 더해 주민 1인당 월 17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는 구상이다.

현재 완도군 인구는 4만4천여명으로 지난 10년간 16.4% 감소했고 고령화율은 40%에 달한다. 특히 54개 유인도 중 인구 100명 미만의 작은 섬이 37곳에 이르는 등 정주 여건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군은 기본소득을 통해 상권을 회복하고 인구 유출을 막겠다는 복안이다. 생필품 구매가 어려운 도서 특성을 고려해 이동형 생필품 공급 체계 등을 연계해 지원금이 다시 소상공인과 농어가로 돌아가는 '지역 순환 경제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한편, 최종 시범 사업 대상 18곳 안팎은 서류·발표 평가를 거쳐 오는 19일께 확정될 예정이다.

/완도=윤보현 기자



함평군, 아토피·천식 예방 프로그램 운영

16일까지 안심학교 5곳 152명 대상

질환관리·공기정화식물 가꾸기 등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은 9일 "오는 16일까지 자광어린이집 등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5곳의 어린이 152명을 대상으로 '쏙쏙, 초록손으로 만드는 공기숲' 프로그램을 총 5회에 걸쳐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진〉

프로그램은 어린이들의 알레르기 질환 예방과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군은 상반기에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알레르기 질환 유병률이 높은 기관을 우선 교육 대상으로 선정해 실효성을 높였다.

주요 교육 내용은 아토피피부염·천식 등 알레르기 질환의 주요 증상과 올바른 관리법 등이다. 특히 공기정화식물 가꾸기 등 눈높이에 맞춘 원예 체험 활동을 접목해 건강한 실내 환경 조성법을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구성했다.

군은 프로그램 종료 후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참여자들의 요구를 파악하고 향후 어린이 알레르기 질환 예방 관리 사업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남오 함평군수는 "아토피와 천식은 어린 시절부터 올바른 생활 습관을 기르고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어린이들이 체험을 통해 건강의 소중함을 배우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함평=기영규 기자

국립의대 논란 서남권 연대로 답해야

≡취재수첩≡



정 해 선
지역특집부 국장

국립의대 신설 대학이 순천대학교로 최종 확정되면서 목포를 비롯한 전남 서남권 지역 사회가 거센 후폭풍에 휩싸였다.

심사 과정의 공정성 논란에 지역민의 분노가 폭발하며 대규모 궐기대회가 이어졌고 나아가 지역 정치권과 행정의 무능을 질타하는 책임론도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의대 유치전 패배가 아니다. 국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철학인 '공정과 상식'에 반해 전남 서남권이 또다시 철저히 소외됐다는 뼈아픈 박탈감이 표출된 것이다.

지역의 명운과 주민의 생존권이 걸린 중대사에 서남권의 목소리가 철저히 배제됐다는 깊은 불신이 바닥에 깔려 있다.

비판의 화살은 지역 정치권 전체를 향하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과정에서 불거진 서남권 홀대론과 더불어 지역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 지방의원들의 안일한 대응 방식이 도마 위에 올랐다.

심사 결과 발표 직후 정치권이 1회성 항의 성명이나 집회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지역 원로와 시민사회단체 등과 협의해 범시민적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했어야 한다는 지적은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무엇보다 사태의 본질인 심사 과정의 공정성부터 철저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 전남광주시 차원의 평가가 객관적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이뤄졌는지 교육부는 어떤 근거로 최종 결과를 승인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 행정의 기준이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의구심을 남겨둔 채로는 무너진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

문제를 소모적인 지역 간 갈등이나 정치적 공방으로만 축소해서는 안된다. 전남 서남권 도서·농어촌 지역의 심각한 의료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인지, 취약한 의료 인프라 확충 방안은 무엇인지 등 '지역 균형발전'과 '의료 형평성'이라는 본질적 해답을 함께 내놓아야 한다.

'잔잔한 바다에서는 훌륭한 뱃사공이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했다. 위기 극복 과정은 곧 공동체의 역량을 키우는 기회다. 지금 서남권에 필요한 것은 서로를 향한 책임 공방이나 공허한 구호가 아니다.

지역 정치권과 행정이 먼저 반성하고 주민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의혹에 대한 투명한 검증과 실천적 연대를 바탕으로 위기를 서남권의 미래를 새롭게 설계하는 진정한 출발점으로 삼아야 할 때다.